안전보다 취업 급급…2018년 강화된 규정 1년만에 완화

직업계 고교생 꿈 짓밟는 현장실습 이대론 안된다

〈3〉 뒤로 가는 현장실습 정책

기준 충족한 기업 현장실습서 서류로만 평가한 기업도 허용 학교·교육청 관리감독은 느슨 여수 요트업체 관계자 입건

여수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숨진 고(故) 홍정운(18)군 사건은 정부의 섣부른 정책 완화와 학교와 교육청의 느슨한 관리·감독, 안전 대책 없는 현장이 맞물리면서 빚어진 참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현장실습생 이민호군 사망 사고(2017년)를 계기로 현장실습 규정을 강화했다가 1년 만인 2019년 느슨하게 완화했다.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 '선도기업' 중심의 현장실습만 진행키로 했다가 학교가 서류만으로 평가한 '참여기업'에서도 현장실습이 가능하게 허용한 게 골자였다.

이 때문에 아이들 안전보다 취업률에 목매는 특성화·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관련자들 입장에 더 기울었다는 지적이 터져나왔지만 바뀌지 않았다.

결국, '참여기업'으로 현장실습을 나간 홍 군은 법으로 금지된 잠수 작업을 지시받고 물 속에 들어갔다가 끝내 살아 나오지 못했다. 정부와 교육부는 당시 참여기업에서 실습 전문가를 '기업현장교사'로 지정, 운영해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허점 투성이였다.

여수 해양과학고 교사와 일부 위원이 서류로 심사한 홍 군의 현장실습 참여기업은 1인 업체로, 학교측은 사업주를 기업현장교사로 지정했다. 결국, 잠수 자격증도 없는 비전문가가 잠수 작업을 지시하고 사업주 혼자서 안전·근로환경을 총괄하면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제지할 사람은 전혀 없었다.

학교측도 취업에만 급급, 순회 지도를 나가지 않았고 전남교육청은 현장실습생들이 나가 있는 참여기업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무책임함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초과 근무에 불법 잠수 작업에 대한 지도 감독은 커녕, 교육청과 학교 당국은 낯선 현장에 투입되는 학생들을 위해 만든 매뉴얼조차 제대로 지켜지는 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이같은 목소리가 정부와 교육청을 향해 쏟아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민주당 강민정(비례)의원은 홍 군이 다니던 여수해양과학고의 해양레저학과의 잦은 학과 개편 실태를 지적했다. 부족한 현장실습처 확보 및 양질의 취업 기업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다보니 학생들의 안전과 노동조건 향상에 소홀할 수 밖에 없지 않았냐는 것이다.

여수해양과학고는 지난 2008년 수산양식(3과), 상업(3과), 자동차(3과) 중심의 학과를 4년 만인 2012년 자영수산(6과), 토탈미용(3과)으로 바꾸더니 지난 2018년 자영수산(6과), 해양레져(3과)로 다시 변경했다. 지역사회 미래 먹거리와 신산업 발전 가능성 등을 고민한 뒤 적합한 인력 양성 학과를 결정했다고 보기보다 지역 내 취업 가능한 일자리와 학생 선호도, 학생 수 감소여건 등을 반영해 취업률 높이는 데 필요한 학과로 선정했다는 지적이 나올만하다.

취업률도 기대에 못 미쳤다. 2018년 토탈미용과의 경우 남학생(3명·100%)을 제외한 여학생(정원 15명) 취업률은 46.67%로 여수 특성화고 평균 취업률(66.1%)에 못미쳤다. 자영수산과 남학생(30명) 취업률은 56.7%였다. 특성화고의 경우 매년 취업률이 교육부의 학교 평가 지표가 되고 현장실습 업체 수가 취업률과 직접 연결되는 점, 가뜩이나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실정을 고려하면 안전, 노동조건 등이 우선 순위에서 밀리게 된다는 것이다.

강민정 의원은 "실제 현장은 바뀐 것 하나 없이 점검과 평가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해경은 12일 홍 군 사망사고와 관련,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업체 관계자 A씨를 입건했다.

해경은 현장 CCTV 영상 분석과 구조에 참여한 요트 관계자 B씨 등 3명 진술, 현장 실황조사,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해경은 잠수작업 시 2인 1개조로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수중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고, 잠수자격증이 없는 실습생에게 위험직무인 잠수작업을 시키면서 잠수자격증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도 배치하지 않는 등 사고예방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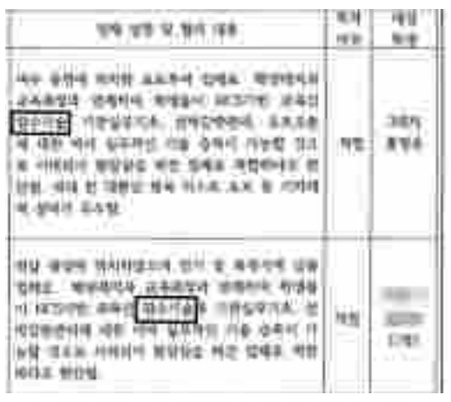
실습 금지된 잠수작업 업체, 학교가 적합 판정 위험 도사린 실습 현장에 다른 학생도 보냈다

여수해양과학고가 현장실습을 하다 숨진 고 홍정운(18)군 이외 다른 학생도 잠수 기술 습득이 가능하다며 선정한 현장실습업체로 실습을 내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학교 교사들은 특히 현장실습기업 선정 과정에서 잠수 작업을 유해·위험 작업의 하나로 규정한 체크 리스트를 작성하면서도 버젓이 '적합'하다고 표시한 것으로 확인돼 무책임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무소속 윤미향(비례)의원과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민주당 강민정(비례)의원이 12일 전남도교육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2021년도 여수해양과학고 현장실습 운영회의록' 자료에 따르면 사고를 당한 홍군 외에 같은 학교 A(18)군이 잠수 기술 습득이 가능한 업체로 현장실습을 나간 것을 확인됐다.

이들 교사들은 회의록에서 A군이 갈 업체를 '광양에 위치했으며 정기 및 측정기계 납품 업체로 해양레저과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생들이 NCS기반 과목인 잠수 기술과 기판실무기초, 선박갑판관리에 대한 여러 실무적인 기술 습득이 가능할 것으로 사려된다'고 평가했다. 산업 현장에서의 미성년자 잠수 업무를 금지하는데도 잠수 기술 습득을 위해 도움이 된다며 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을 보내기까지 한 것이다.

특히 이들이 작성한 현장실습기업 선정 체크 리스트에는 미성년자인 학생이 하면 안되는 '잠수 업무' 등을 취급하는 업체인지를 묻는 체크 리스트에 '적절' 하다고 표시했다. 교사들이 스스로 잠수 업무를 미성년자에게 시킬 수 없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 생각 없이 현장실습업체로 선정, 아이들을 위험에 내몰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수해양과학고의 현장실습 업체 선정 회의록.

광주일보는 A군과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27일부터 업체에 현장실습을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군은 다행히 잠수작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학교 안팎에서는 홍군 뿐 아니라 A군에게도 현장 실습 기업에서의 안전·노동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학생들을 실습처로 보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문화전당 상상마당서 야간 음주 안돼요

12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상상마당에 출입 금지 통제선이 설치돼 있다. 문화전당측은 최근 야간음주로 코로나19 확산 우려 민원이 급증하자 출입을 제한하는 안내문과 통제선을 설치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에도 구속 왜?

딸 학대 아버지 "죄질 불량"…초등생 흉기 협박범 "누범 처벌"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사건 판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양형요소로 꼽힌다. 법원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 합의했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고 형량을 판단할 때 '처벌불원'을 감형 요소로 고려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자신의 이성문제를 지적하는 부인에게 폭력을 휘둘러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히고 이 과정에서 10개월된 자신의 딸을 들어올려 창문 밖으로 매달아 흔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개 범죄 이상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개월~3년 3개월인 점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는 게 박 부장판사 설명이다.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A씨도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지만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생후 10개월밖에 안된 자녀에 대한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같은 재판부는 또 특수협박,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51)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B씨는 특수상해죄로 출소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지난해 12월 8일 휴대폰을 빌려주지 않고 놀렸다는 이유로 11살짜리 초등학생들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았고 최근 신발을 훔친 절도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특수상해 혐의와 관련된 피해학생들과 보호자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B씨의 정신적 질병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면서도 누범으로 처벌해야 하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

상가매매(상무지구)
1) 40평(전용) 2억5천(융1억) 보1천 월100
2) 60평(전용) 4억5천(융3억) 보2천 월200
3) 140평(분양) 시세 9억 매가 7억(융 4억) 월수익 280만(보4천)
(사무실 리모델링함, 빠, 유흥, 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010-6670-9800

장성 토지(매매 분양)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대출가능)
[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
010-6670-9800